



연합속보 | 국제 | 정치 | 경제/산업 | 사회/지방 | 문화 | 스포츠 | 정보/과학

징용피해자들, 미쓰비시 상대 집단 소송

(부산=연합뉴스) 박창수.조정호기자 =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국내법원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전후 배상소송이 가해국인 일본이 아닌 피해국인 한국에서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원폭피해 미쓰비시(三菱)징용자 동지회' 소속 박창환(朴昌煥, 77.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 등 회원 6명은 1일 오전 10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와 한국연락사무소를 상대로 6억600만원의 배상금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태평양전쟁말기인 지난 44년을 전후해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 지금까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이 소송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법원에 이미 항소심 계류 중이며 지난해 10월 1심 패소후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 보자는 일본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연락사무소를 찾아내 해당 지역 법원인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측이 일본인들에게는 비상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인 징용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죽음의 위기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당시 국제관습법상 금지된 노예제를 위반한 것이며 이밖에도 일본 현지에서 당한 한국인 피폭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국내법적 책임,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 "원고 1인당 1억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들고 있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부산역 철도그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소송을 계기로 지난해 4월과 12월, 지난 2월 각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등지 법원에 일본기업을 제소한 국제사회 피해자들과 연대해 배상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 재판지원회 조직을 통한 모금활동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와 미쓰비시의 국내영업 저지운동, 항의 메시지 보내기, 국제 인권단체의 동향요청 등 조직적인 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92년부터 일본 현지에서 벌어진 관련 재판에서는 모두 "개인은 국제법상 권리 주체가 되지 않는다", "메이지헌법 아래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 "시효가 소멸됐다", "과거의 미쓰비시와 현재의 미쓰비시는 별개 회사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모두 패소했다.

이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이같은 잇따른 패소에도 미국내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하는 관련 소송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 규모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6백여 독일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유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각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의 소송의지를 부추겼다.

swiri@yonhapnews.co.kr

(끝)

[< 이전화면]

[Home](#) [Money Info](#) [Entertainment](#) [Music Bank](#) [Life](#) [Sitemap](#)
Copyright(c) 2000 [YONHAP NEWS AGENCY](#)